

오피니언

월/요/광/장

장택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지역 생계비는 서울의 65%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다. 특히 주거비는 서울의 25%에 불과하며, 자녀교육비는 80% 정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광주 고등학생의 수능성적은 해마다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도시로서 광주의 뜨거운 교육열 덕분일 것이다.

광주의 교육열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각각 1만 여명의 광주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대하여 한국은행 직원이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인원 수는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생의 9%, 중학생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은행 전국 지역본부 실적 중에서도 가장 높다.

유치원생들도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화

폐전시실을 견학하고 경제교육도 받고 있는데, 그 수가 연간 3000여명으로 광주지역 전체 유치원생수의 18%에 해당한다.

어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구열을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02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취임한 이후 뉴욕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도심 재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장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뉴욕의 기업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에서

이들은 매월 1~2 차례 우리와 비슷한 조찬모임을 가지면서 뉴욕을 명품브랜드 도시로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짜 모았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I♥NY'라는 디자인도 여기서 태동한 것이라고 한다.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광주 모습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명품도시의 탄생이 시장 한 사람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달성하기에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취임 1년 반을 맞은 강운태 시장의 비전과 리더십에 민간지원에서의 자발적인 지원이 더하여 진다면 광주의 미래는 더욱 밝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기는 하나, 앞으로도 해마다 지역경제 발전의 추진력을 중앙정부의 온정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는 방안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모임에서 논의되고,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해 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다 밝은 광주의 미래가 보인다.

이와 같이 높은 교육열은 학생들에게서 만 그치지 않고 지역 상공인들에게서도 크게 느낄 수 있다. 매주 금요일 광주경쟁 자총협회가 개최하는 금요조찬포럼이 지난 10월 177회로 22년간 지속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매월 개최하는 광주경제포럼도 이번달 147회로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참석할 때마다 지역 상공인 및 경영자들의 넘치는 향학열을 크게 느낀다. 이러한 열정이 기업경영에 응용되

뉴욕을 어떻게 하면 범죄가 없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결과라고 들었다.

1970년대 범죄가 만연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시 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뉴욕을 문화·예술 관광 쇼핑 및 식도락의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더 나은 뉴욕연합(ABNY : 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이라는 회원수 300여명의 비영리 단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년 동양평화론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한·중·일 3국 간 동양평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동행사를 설립하고 공동화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공동평화 군대 대학을 창설하자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2003년 일본 동경에서 처음 출범한 "원 아시아 클럽(One Asia Club, 약칭 OAC)"은 일본, 중국, 한국, 몽골, 태국,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등 국제적인 민간단체 모임으로 "하나의 아시아"를 이상과 목표로 출발하였다.

아시아 각국 시민간의 친선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통한 긴밀한 연대였다. 21세기 글로벌화와 정보화시대 유럽의 EU처럼 아시아도 민족과 국경, 이념,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하여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이 국경과 민족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아시아 대륙의 광활함과 풍요로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호남대 교수·원아시아클럽 광주 회장〉

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자존(自尊)의식을 길러야 한다.

자기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나아가 내 곁의 남도 그려낸 소중한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가치관령 교육을 대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명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살예방상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초대 시민직선 장관국교당감이 이끄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혁신학교 등을 만들어, 학생이 "행복한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민주시민 육성" 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학생과 소통과 배려를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와 교육청차원의 학생교육만이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인간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가치관 속에 깊이 내재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강화하고, 민주적 시민질서 등이 생활화 되도록 하여, 실질적 효과가 거贵阳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시인·광주 국·공립중등교장 협의회 회장〉

전에 회사에서 나온 뒤 수십 군데씩 업체에 지원서를 내봤지만, 모두 채용을 거절당했다. 거의 30년간 직장생활을 했지만 도중에 몇 군데 막으셔서 빠져금도 많지 않고, 저축도 그나마 뒤늦게 구입한 주택 대출금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해 현금이 많지도 않은 상태다. 당장 4대 보험도 해결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고, 아직 자녀의 교육과 결혼문제

제를 책임지고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어야 할 50대가 이렇게 처량하게 버려지는 상황이다.

고령사회 진입을 그냥 세월에 맡기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정년연장과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고령사회 정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 늘려야

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조차 애매한 정도다.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중반에 이미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난 젊은 노인들의 실태는 이제 날의 일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사오정과 오류도는 기본이라 40~50대 초반에 퇴직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정년도 체우지 못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현실이 더없이 슬슬하다. 이미 다 기계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인원이 감축되고, 최장 8개월 동안 지급되는 실업 급여 기간 동안 열심히 새 직장을 찾았더니 보지만 여의치가 않다.

필자의 형님도 50대 초반인데 벌써 1년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한·중 FTA 협상보다 농업대책이 먼저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된다는 소식에 전남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FTA로 축산분야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까지 체결돼 값싼 중국 농산물이 밀려와 경우 전남 농촌의 붕괴가 불보듯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한·중 FTA 발효시 15년간 도내 농산물 생산감소는 4조963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생산감소액(26조1222억 원)의 19%에 해당된다. 문제는 농업의 전 분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미 FTA 농업피해 대책도 지지부진한 마당에 그보다 훨씬 파고 큰 한·중 FTA까지 체결된다면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토퍼화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한·중 FTA를 성급하게 체결해서는 안 되며, 농업피해 대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한·중 FTA는 양날의 칼이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농업 등 분야의 타격이 기존 FTA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제다. 중국 농산물은 한국 산에 비해 가격차가 최대 15배에 이르고, 품종·품질도 비슷하다. 실제, 한·중 FTA 발효 10년이 되면 곡물류 37%, 채소·특용작물 36% 등의 생산감소가 불가피하다.

우리 농업이 국제적으로 비교 열위인 업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농업은 어느 나라든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 기반 산업이다. 정부는 한·중 FTA 피해를 최소화할 완충장치를 만들고, 농산물은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반대 여론이 비등한 고속철도(KTX) 분할 민영화 방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태세다.

KTX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돼 운행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견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비대위는 최근 국민적 우려와 반대가 크다며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통합당도 이미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복'인 철도의 공공성 훼손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영화 대상인 KTX는 코레일 노선 가운데 경쟁력이 가장 높아 30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KTX의 수익을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도 흑자노선만 민간에 넘겨 경쟁구도를 갖추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경쟁이 안 되는 적자노선은 운행이 어려워지고, 서비스와 안전성 저하는 물론 요금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4조 원의 나랏돈으로 시설을 갖춘 '알짜배기'만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특히 시비를 부를 소지도 크다.

정부는 KTX의 민영화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사안을, 더구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강행하는 것은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한나라당 비대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통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 등이 꼽혀왔다. 전문성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를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경례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소통에 소홀했던 정치권 인사들은 서둘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가입해 젊은 층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고, 한나라당도 'SNS 역량지수'를 개발해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최근 문제가 된 돈선거·조직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정보의 범람과 보안문제 등을 풀어야 할 숙제다. 새 흐름에 편승해 정치인들이 쓴 아내는 '시늉만 소통' '가짜 소통'을 가려내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뜻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

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

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

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

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

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

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

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

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

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

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

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

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

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